

# Global Goings-on

## 노르웨이

###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발표 (National strategy to reduce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1. 노르웨이 보건 의료서비스부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음.
  - 노르웨이의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건강도 좋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건강의 불평등은 주로 사회시스템적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
  -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함.
2. 이 보고서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소득, 유년기 환경, 고용 및 근무 환경,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

히고 이를 위한 4가지 국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첫째, 안정된 유년기, 공정한 임금 분배,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 둘째, 개인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취하는지 여부도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여러 사회적 장벽으로 교육, 고용 등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함.
- 넷째, 건강의 불평등은 다른 분야의 불평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출처: 노르웨이 보건 의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www.regjeringen.no/en/dep/hod/Documents/regpubl/stmeld/2006-2007/Report-No-20-2006-2007-to-the-Storting.html?id=466505&epslanguage=EN-GB>

## 미국

### 보건의료 분야의 IT 도입 추세 (From clipboards to keyboards)

1.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Information Technology(IT) 도입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IT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2006년, 금융 분야에서의 IT 투자비용이 2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비해, 보건의료 분야는 2백 6십 억 달러로 1/10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의 John-David Lovelock은 보건의료 분야의 IT 투자비용이 2010년까지 매년 4.7%씩 증가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음.
2. 지금까지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시스템 등 IT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개인병원의 경우 시스템 전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고, 보험회사나 병원은 경쟁 업체들과의 환자 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음.

3. 그러나 정부와 기업 고용주는 IT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부시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민 전자의료 기록 체계의 확립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 프로그램인 Medicare 참여 의사가 전자시스템을 도입했을 시에 환급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 기업 고용주들도 IT 도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첨단 IT 기술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2006년에 인텔, BP, 월마트 등의 기업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Dossia라는 독립적인 비영리 시스템 개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바 있음.
- 4.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이외에도 건강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도 활발하여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IT 도입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임.

출처: THE ECONOMIST 2007년 5월 19일자  
[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9196289&CFID=10972638&CFTOKEN=56080620](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9196289&CFID=10972638&CFTOKEN=56080620)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안  
(Obama can remedy an ailing  
healthcare system)**

1.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 후보들은 보건의료 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있음.

- 이것이 시의 적절한 이유는 미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서유럽 국가들보다 2배 많이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음. 또한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4,5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민주당 후보 중에서 바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안이 주목할 만한데, 그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제시했음.

- 첫째,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특별세금을 징수하여 고용에 따른 의료보험을 강화함.

- 둘째, 현재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Federal Employee Health Benefit Program)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가입비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 등을 막음.

- 셋째,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국립의료보험거래시장(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을 도입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늘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

3. 바락 오바마는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전자의료기록시스템의 도입과 예방위주의 의료서비스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그의 계획에 따르면 한 가족 당 매년 2,50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FINANCIAL TIMES 2007년 6월 4일자  
<http://search.ft.com/ftArticle?queryText=Baptist+Healthcare+System%2C+Inc&id=070604000752>

**빈곤정책의 방향  
(False Choices on Poverty)**

1. 미국 빈곤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

- 공화당은 빈곤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함. 즉, 지나치게 관대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나태함, 약물중독 등의 개인적 문제가 나타났고, 이러한 것들이 빈곤을 초래했다고 주장.

-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빈곤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열악한 임금으로 연명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월마트화' 된 사회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음.

2. 이렇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은 빈곤에 대한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데 있음.

- 민주당의 주장대로 자본주의가 경제적인 약자들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화당의 주장대로 개개인의 노력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임.

-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태어날 때의 사회적 계층이 훗날의 경제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많이 존재함.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자란 형제간에도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음.

3. 빈곤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 중 어느 하나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빈곤정책은 정부와 산업계의 사회구조적인 노력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개인의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 90년대 클린턴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확장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노력을 벌인 바 있는데, 이것은 90년대 후반 아동과 흑인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THE AMERICAN PROSPECT 2007년 4월 22일자  
[http://www.prospect.org/cs/articles?article=false\\_choices\\_on\\_poverty](http://www.prospect.org/cs/articles?article=false_choices_on_poverty)

**노인 요양시설 개선 노력  
(New Ways to Aid the Old)**

1. 1987년 미 연방의회에서 노인 요양시설 개혁법(Nursing Home Reform Law)이 통과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요양시설의 개선은 미약하였음.

2. 그러나 최근 비영리단체인 Pioneer Network를 중심으로 노인 요양시설 환경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50만 명이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6,000여개의 요양시설 중 개혁을 단행한 곳은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 따라서 노인들이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3. Pioneer Network는 노인 요양시설 개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첫째,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원함. 전화사용, 룸메이트 결정, 외출 등에 있어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많을 때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요양시설에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를 돕거나, 개를 키우거나, 영어에 능하지 않은 스태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등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스태프와 환자 간의 인간적 유대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 현재 요양시설 스태프는 해마다 70~100% 교체 되는데, 이는 인간적 유대에 기반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넷째, 맞춤 의료서비스가 필요함. 한 연구에 따르면, 맞춤치료(individualized care)가 치매환자의 공격성, 불안정성 등의 증세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07년 6월

12일자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6/11/AR2007061101926\\_pf.html](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6/11/AR2007061101926_pf.html)

## 영국

### 출산율 26년 만에 최고치 기록 (Hints of a baby boom as fertility rate hits highest level for 26 years)

1.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합계출산율은 2005년의 1.8명 보다 증가한 1.87명을 기록하였음.
- 영국은 2001년부터 5년 연속 출산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6년은 1993년 이후 1년간 가장 많이 출산한 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추세는 영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인 2.1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임.
2. 여러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주로 고령출산과 영국 이민가정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 2006년 35~39세 연령대의 여성 1,000명 당 53.8명을 출산했으며(2005년보다 7% 증가), 4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수는 1996년 12,103명에서 2006년 23,703명으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수는 2006년 150,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하였음.

3.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의 Julia Margo는 영국의 출산율 증가추세가 정부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음.

출처: THE GUARDIAN 2007년 6월 8일자  
<http://society.guardian.co.uk/health/story/0,,2098112,00.html>

### 보수당, 결혼한 커플 지원 계획 발표 (Tories plan tax and benefit boost for married people)

1. 영국 보수당은 결혼한 커플에 세금우대 및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보수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2007년 7월 10일 발표할 예정임.

- 보수당 당수인 David Cameron은 사회해체(social breakdown)의 주원인이 가족의 붕괴에 있다고 주장하며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함.
- Cameron은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 자녀가 5세 되기 전에 이미 절반가량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한 커플은 헤어지는 경우가 12쌍 당 1쌍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수치를 인용, 결혼한 커플에 세제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보수당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영국의 사회해체가 초래하는 손실이 매년 1,020억 영국파운드에 이르며, 이 중 가족붕괴는 240억 파운드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2. 한편 이러한 보수당의 주장은 노동당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Gordon Brown은 결혼한 커플에 한정된 세제혜택에 반대하며,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출처: THE GUARDIAN 2007년 7월 9일자  
[http://www.guardian.co.uk/uk\\_news/story/0,,2121724,00.html](http://www.guardian.co.uk/uk_news/story/0,,2121724,00.html)

## 중국

### 식품의 안전성 문제 (Chinese regulator warns on food safety)

1. 얼마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애완동물 사료에 독성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후 산업용매가 함유된 치약 등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중국산 식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 중국 품질검사 및 검역 당국인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품질검사를 받은 소비자상품 중 1/5 가량이 불량 판정을 받았음.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식약청 식품안전 관리부장 Sun Xiande는 자국의 식품안전성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식품 안전성 문제는 중국의 식품산업 발전에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Sun Xiande는 수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중국의 국제무역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

출처: FINANCIAL TIMES 2007년 7월 10일자  
<http://www.ft.com/cms/s/6e99f558-2e43-11dc-821c-0000779fd2ac.html>

## 캐나다

### 가족 지원 정책 (Support for Families)

1. 캐나다 인적자원 · 사회개발부 장관 Monte Solberg는 6월 15일, '가족은 사회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을 발표하였음.
2. 2007년 예산은 새로운 근로가정 세금제도와 더불어 캐나다의 가정을 지원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8세 이하의 유 · 청소년이 있는 3백만 이상의 가정에 310캐나다 달러(약 27만원)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제공
  -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의 연 저축액 4,000(약 350만원)달러 한도를 폐지하고 평생 기여 한도를 늘림으로써 이를 강화

- 캐나다 교육 적금 보조금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의 연 최대 보조 금액을 500달러(약 44만원) 로 상향조정

출처: 캐나다 종합아동보육계획 홈페이지  
<http://www.universalchildcare.ca/en/news/20070608.shtml>

## 호주

###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확대 (Volunteer Management Program)

1. 5월 14일, 가족 · 지역사회 서비스 · 토착민 담당부는 자원봉사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7월 1일부터 정부는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를 추가하여 총 570만 달러(약 45억원)를 지원할 예정임. 이것의 일환으로 봉사자원 관리센터(Volunteer Resource Centre)는 25개소가 추가로 개설되어, 총 49개의 센터가 운영될 것임.

2.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들 센터에서 보건, 복지, 지역 복지, 응급 서비스, 문화, 예술, 전통,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 청소년 개발, 해외원조, 동물 복지, 인권, 종교 관련 분야에서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접할 수 있음. 이들 기관들은 또한 봉사자원 관리센터에 접촉하여 자문을 얻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3. 정부는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로 지역사회 안보, 기술 개발, 지역민 및 가족의 민주적 시민 의식 확충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출처: 호주 가족 · 지역사회 서비스 · 토착민 담당부 홈페이지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nsf/aboutfacs/programs/communities-vmp\\_expanded.htm](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nsf/aboutfacs/programs/communities-vmp_expanded.htm)